

## 중동의 민주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판적 재고

권영승(성균관대학교)

최근 발생한 중동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4의 민주화 물결’의 끝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중동의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이 향후 북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주된 근거는 중동 국가들과 북한이 갖는 체제적 유사성, 통신수단의 증가에 따른 의식 변화 가능성, ‘촉발 요인(hair-trigger)’에 의한 대중 동원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분에 따라 실제로 두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혁명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북한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공통점 이외에도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북한은 중동과 달리 혁명을 추동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미비하며, ‘선군’으로 대표되는 군과 최고지도자의 밀접성 등으로 인하여 중동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조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중동의 혁명에 큰 역할을 했던 SNS 등 통신수단의 확대에 의한 의식의 변화 역시 현재의 북한에서는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체제 유지에 순기능을 가져다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분신과 같은 촉발 요인의 발생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역시 북한이 오랜 기간 시행해온 사회적 통제 및 연좌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이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을 논증하며, 향후 북한과 중동 간의 외교적 변화와 국제 사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등 현실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중동, 북한, 민주화, 혁명, SNS, 촉발 요인(hair trigger)

## 1. 서론

1970년대 중반, 남부 유럽의 권위주의 정부가 붕괴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일련의 민주화가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이러한 변화를 ‘제3의 민주화 물결(Third wave of democracy)’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러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로 이어지는 중동 민주화의 물결은 다이아몬드(Larry Diamond)의 예측, 즉 21세기의 첫 20년 동안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다면, 탈냉전 이후 등장했던 제3의 민주화 물결보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를 재생시킨다.<sup>2)</sup>

1) ‘민주화’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시민혁명 과정을 독재체제의 종식과 민주화의 이행(Transition) 측면에서 고찰한다.

2) Larry Diamond,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1차 민주화 물결은 1828~1926년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2차 민주화 물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3~1964년의 신생독립국가들, 3차 민주화 물결은 1985~1991년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동

그랜드(Stephen R. Grand)는 이러한 현상을 ‘제4의 민주화 물결’로 정의한다. 즉 중동의 변화는 1980년대 동유럽·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제3의 민주화 물결을 잇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sup>3)</sup>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제3의 물결을 일으킨 5대 요인, 즉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성 문제, 생활수준과 지적 능력의 향상, 종교의 반권위주의적 행태, 다수 국가의 민주주의 지지, 민주화의 전신효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4)</sup>

중동의 변화는 경제적인 불만이 일거에 폭발하여 혁명으로 이어진 사건인 동시에, 수십 년간 이어져온 중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즉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의미 역시 강하게 내포한다. 이는 아랍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의 역사에서도 그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며, 특히 각 국가가 처해 있던 구조적·경제적 문제 외에도 위성방송, 인터넷, SNS 등의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조직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의 혁명들과 가장 크게 대별되는 부분이며, 실제 미디어가 가장 발달한 튀니지와 이집트가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먼저 변화를 달성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에 그랜드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번 제4의 민주화 물결이 아랍 지역 너머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동의

---

유럽국가와 소연방 해체 시기를 말한다.

3) 1980~1990년대의 민주주의 이행론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적 구조보다는 정치집단들 간의 권력 경쟁과 갈등에 초점을 맞춘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불확실한 과정이다.

4) Stephen R. Grand, “Starting in Egypt: The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Brookings*(February, 2011).

혁명을 계기로 가깝게는 이란의 ‘녹색운동’<sup>5)</sup>이 좀 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멀리는 중국의 반독재 운동은 물론 러시아에도 민주화 물결이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민 간 소통 수단의 발달이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지구상에서 유일한 3대 세습체제인 북한에까지 이를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에서도 중동과 유사한 방식의 변화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져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동에서 크게 요동치는 민주화 물결의 끝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존재한다. 먼저 강고해 보였던 중동의 독재체제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중동 국가들과 유사한 조건을 지닌 북한 역시 점차적으로 비슷한 행보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적 관점’이다. 실제 중동 국가들과 북한체제 간에는 뿌리 깊은 독재체제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는 북한이 제2의 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북한 역시 중동처럼 점차 통신수단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동처럼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떠

---

5) 이란의 녹색 운동은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국민들의 운동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녹색은 개혁파 후보 무사비(Mir Hossein Mousavi Khameneh)의 상징색이자 이슬람에서 성직자를 상징하는 색이다. 녹색 운동은 어떤 범위에서는 기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자, 군부의 보호를 받고 주요 경제 기관들을 지배하는 소수 집권층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녹색 운동은 현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혁명으로는 보기 어렵다. 유달승, “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결합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1권 2호(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2), 13쪽.

한 계기로 인하여 촉발될 경우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실제 현재의 중동과 북한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만큼이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앞서 언급한 주장들은 두 지역 간의 세부적인 비교를 행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체제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가 가지는 만성적인 문제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sup>6)</sup> 또한 중동의 민주화와 북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일련의 연구 역시 단순히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한다. 먼저 2절에서는 중동의 민주화 혁명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 뒤, 이러한 중동의 민주화를 북한과 연계시켜 설명하는 기존의 논리를 ‘체제의 유사성’, ‘통신수단의 증가와 의식 변화’, ‘축진·축발 요인의 가능성’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3절에서는 이러한 세 명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논리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4절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중동 민주화 혁명의 의의를 다시금 정리하고, 오히려 이러한 연쇄적인 혁명이 북한지도부에 체제의 안정과 내구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6) 박형중, “북한의 과거와 미래: ‘변화’와 ‘붕괴’의 이분법 지양 및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모색,”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2.11.06), 97쪽.

## 2. 중동의 민주화 혁명과 북한과의 연계

### 1) 중동의 민주화 혁명 과정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일반적인 예측을 넘어 급격하고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은, 웨보르스키(Adam Przeworski)와 쿠란(Timur Kuran)의 혁명에 대한 논의를 재생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혁명이란 우연한 계기를 통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 정치 현상이며, 그 배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행위자의 손익 계산과 합리적 선택이 존재한다. 즉 강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대중은 폭발력을 갖고 돌변하며 정권에 대한 불만을 급격하게 표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반대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 비용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위주의 정권에 충격을 가하는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면 그 과급력은 견잡을 수 없게 번지며 결국 정권의 붕괴라는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실제 중동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제스민 혁명’<sup>8)</sup>은 무함마드 부아지지(Muhammad Bouazizi)라는 한 튀니지 청년의 분신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가 죽어가는 모습은 인터넷과 휴대폰,

---

7) 장지향, “혁명의 우발성과 다양성: 2011년 ‘중동의 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No. 11(아산정책연구원, 2012), 2쪽.

8) 제스민(Jasmine)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튀니지의 국화이다. 당시 튀니지에서 실업상태에 놓여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주로 물담배와 제스민 차를 마시면서 지내다 일거에 격변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SNS 등을 통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분노한 튀니지 국민들은 곧바로 반정부 시위를 개시하였다. 당시 튀니지의 정부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을 차단하고 검열했으며, 이와 연관된 주동자들을 체포하였다. 하지만 튀니지인들은 검열을 피하는 갖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정부의 제재를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23년간 튀니지를 통치하던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주하는 중동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불과 3일 뒤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지방 도시들에서 이집트인 3명이 분신하였고, 이 영상들 역시 이집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얼마 뒤 카이로에서도 역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으며, 이집트인들은 “키파야(Kifaya)”<sup>9)</sup>를 외치며 ‘현대판 파라오(pharaoh)’라 불렀던 무바라크(Hosni Mubarak)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집트 역시 제도권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SNS를 통한 새로운 연대를 창출하여 정부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투쟁이 이집트 전국으로 확산되자 무바라크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을 동원하였는데, 이집트 군부는 정부의 지시를 어긴 채 중립을 지켰다. 이후 전국에서 좀 더 격렬한 10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집트 군은 시민들 편으로 돌아섰으며, 결국 이집트를 30년간 통치하였던 무바라크는 퇴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무려 42년간 독재 권력을 유지하던 카다피(Muammar Gaddafi)의 리비아로까지 이어졌다. 리비아는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달리 그 항쟁이 초반부터 폭발적인 봉기와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카다피는 오랜 기간 대내적으로 절대적인 카리스마

---

9) 시위대는 아랍어로 “무바라크 키파야(충분하니 이제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중앙일보』, 2011년 1월 29일).

를 발휘하며 국가를 이끌어왔고, 관료적 행정체제를 통한 통치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혁명위원회와 부족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정당 및 노동운동, 민중운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 억눌려 있던 리비아의 민중과 반카다피 세력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국토의 전 지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갔으며, 급진 이슬람주의자들과 정부군에서 이탈한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부족을 배경으로 결집했다. 이후 ‘오디세이 새벽 작전(Operation Odyssey Dawn)’이란 작전명 아래 진행된 나토(NATO)의 적극적인 공습과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무장봉기에 힘입어, 리비아 반군은 트리폴리에 무혈 입성하였다. 트리폴리를 탈출한 카다피는 저항을 계속하다가 자신의 출신지인 시르테에서 10월 20일 생포되어 사살되었다.

푸아드 아자미(Fouad Ajami)를 비롯한 많은 중동 학자들은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아랍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역학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전망했다.<sup>10)</sup> 실제로 이러한 중동의 민주화 혁명의 물결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지금도 주변의 많은 아랍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동의 지리적 특수성에 근거한 석유자원과 오랜 독재, 왕정의 존속 등을 이유로 중동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이처럼 급격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그 방식이 기존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SNS를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기였다는 점에서 혁명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정상들은 중동 혁명을 ‘민주화 혁명’으로 규정지으면서, 그 원인으로 장기 독재정권이 초래한 실업과 고물가 현상 등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절대 권력의 부패를 들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종파 및

---

10) 서정민, “아랍 시민혁명 끝은 북한,” 『통일한국』, 3월호(2011), 29쪽.



부족 간의 사회적·종교적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후 현대 정보화 문명이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한 데 힘입어 혁명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SNS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11)</sup>

반면 유달승은 SNS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이는 서민들의 저항과 힘으로 성공한 혁명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저항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집트 혁명을 단순히 SNS 혁명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시민혁명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은 SNS라는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이집트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서구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2)</sup>

이렇듯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SNS의 역할과 그 비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SNS가 이번 혁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외세의 의존 없이 일반 시민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중동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화 혁명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서방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와 시민들의 좌절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동은 1990년대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 제공이 약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도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와 식료품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대화되었다. 이보다 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최악으로 치달았던 청년들의 실업률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 혁명 당시 이집트의 전체 실업률은 9.4%인데 반해 15~19세의 실업률은 88.7%에 달했으며, 튀

---

11) 정상률, “빵의 혁명, 자유의 혁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동 민주화 혁명의 배경과 남아있는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제43호(2011), 212~229쪽.

12) 유달승, “아랍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 『문화과학』, 제62호(2011), 185~195쪽.

니지의 경우도 전체 실업률은 12.63%인데 반해 15~19세의 실업률은 69.5%에 이르렀다. 이처럼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무력감 및 분노가 극도로 깊어지면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sup>13)</sup>

## 2) 북한과의 연계: 기존의 논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중동의 혁명이 향후 북한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혁명 이전의 중동 국가들과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사성이 주된 근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체제의 유사성

이는 중동과 북한이 오랜 독재로 인한 권위주의 정부의 잔존 및 부패의 심화 등 많은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으므로, 북한에서도 개혁·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의식이 변화하면 중동과 같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중동과 북한의 정치체제는 각각 다양하게 규정되며, 특히 중동의 경우 하나의 틀로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는 방대한 지역에 걸친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특징과 구조 및 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명이 발생한 중동의 세 국가와 북한이 가진 주된 공통점으로는 먼저 최고지도자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꼽을 수 있다. 튀니지의

---

13) 고경민 외, “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 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2011), 144쪽.

벤 알리는 23년,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30년, 리비아의 카다피는 무려 4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였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1인 장기 집권은 강력한 독재를 필요로 하며, 3대 세습을 이루어낸 북한 역시 내부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벤 알리, 무바라크, 카다피는 모두 부정부패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이 역시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잉태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혁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북한의 역대 최고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북한 역시 중동에서 공화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처럼 강한 가부장적 전통을 지녔으며, 조선왕조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공통 요소이다.<sup>14)</sup>

이에 이러한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 등에 염증을 느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북한도 언제까지나 혁명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 예로 송봉선은, 북한이 중동의 독재자들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이슬람의 제정일치 형태를 모방하였고, 중동 역시 북한의 신권적 정치체도를 답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북한 역시 중동처럼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이유로 북한도 머지않은 장래에 독재가 종식되어 민주정부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류사의 귀결이라 주장하였다.<sup>15)</sup> 이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의 경험이 없는 중동 국가들에서도 민주화 혁명 및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북한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가능할 것이며 다만 그러한 조건들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14) 고영환, “통제체제 차원에서의 중동 M-혁명과 북한의 비교,” 『중동 시민혁명과 북한 민주화 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1.3.14), 31쪽.

15) 송봉선, “요동치는 중동, 북한은 어떻게 될까,” 『북한』, 제472권(2011), 38쪽.

주장이다.<sup>16)</sup>

## (2) 통신수단의 증가

서정민은, 중동의 SNS로 인한 혁명의 끝이 북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북한에서의 휴대폰 및 통신수단의 확대를 언급하였다.<sup>17)</sup>

이는 중동의 민주화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기제가 SNS 및 통신수단이었던듯이, 최근 북한의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증가가 중동과 유사한 결과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개혁·개방 및 정보기술의 확대에 따라 통신수단의 증가 역시 현재와 같이 점점 활성화된다면, 이것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그 틀이 공고해진다면, 북한 역시 중동처럼 전에 없던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및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동 지역의 경우 이러한 통신 기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가 빨라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치의식(political consciousness) 혹은 인식(perception)이 변화하여 대중 동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휴대폰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점차적인 통신수단의 확대와 이로 인한 의식의 변화가 향후 중동과 같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

16) 고영환, “통제체제 차원에서의 중동 M-혁명과 북한의 비교,” 32쪽.

17) 서정민, “아랍 시민혁명 끝은 북한,” 31쪽.

### (3) 촉발 요인의 가능성

이는 중동에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분신과 같은 ‘촉발 요인(Trigger)’이 북한에서도 발생할 경우, 고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체제에 대한 불만이 오랜 기간 증폭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도 더욱 예측 불가능하며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이수석은, 북한 역시 중동처럼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질 경우, 억눌려왔던 북한 주민들의 일시적인 봉기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는 북한 사회 내에 이미 상당 부분 퍼져 있는 시장 및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적 학습 상태, 남한 및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공유 및 초급 단계의 정치의식 등이 현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었을 때, 체제를 아래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 변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는 서서히 쌓여온 외부세계의 정보가 잠복기를 거치면서 촉진·촉발 요인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북한 역시 응축되어 있던 사회적 불만의 잠재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공통된 내면 의식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결국 돌발적인 촉발 요인에 의해 특정한 저항 세력의 조직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북한과 연계시켜 설명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두 지역 간에 상당 부분 존재하는 일정한 유사성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는 사실상 ‘중동의 현재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3절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두 지역을 비

---

18) 이수석, “중동 민주화혁명과 북한,” 『NEWSLETTER』, 제138집(2011), 2쪽.

교하며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3. 실증적 평가

#### 1) 북한체제는 중동 국가들과 유사한가?

중동 지역의 경우, 정치·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족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체제를 유지하는 주된 기제로서 활용되어왔다.<sup>19)</sup> 이는 ‘주체사상’이라는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역시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북한과 일차적인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지역 간의 연계는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의 틀로서 분석이 가능하다. 신전통주의는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이념이 갖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대두된 개념이기는 하나, 중동과 북한이 모두 전통과 유사한 현상이 현대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재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적용이 가능하다. 신전통주의는 정치적 통제와 감시 메커니즘을 통하여 반체제적 요소들을 억압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강조한다. 정부로 대표되는 이러한 ‘감시자’의 존재와 충성으로 얻어지는 적절한 보상은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와 맞물려 현대의 정치체제에도 그 구조가 투영되고 있다. 왈더(Andrew G. Walder)는 신전통주의에서 사용되는 ‘전통’의 의미를 의존(dependence), 복종(deference), 특수주의(particularism)로 정의하였다.<sup>20)</sup> 이는 단순히 과

---

19) 실제 중동의 민주화 혁명은 부족사회의 가부장적 권위,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정민 외,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서울: 대외정책연구원, 2011), 12쪽.

거의 전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를 포함한 전통적인 특성들이 현재의 정치체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전통주의적 특징은 정부에 대한 복종 및 충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특히 오랜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중동과 북한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중동은 모두 국가정책이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지도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측근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이처럼 최상층부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지도자와 측근들 간의 비공식적인 가산제적 지배관계와, 국가 관료제의 합법적인 통치기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지배체제를 ‘신가산제’로도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이행론의 관점에서 이른바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의 지배관계의 특질이나 권력구조의 변형과 관련해서, 신가산제 개념은 어느 정도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sup>21)</sup> 즉 3대 세습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오랜 혈연정치와, 마찬가지로 가계 세습으로 권력과 부를 대물림해왔던 중동의 국가들도 이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 절에서는 민주화 혁명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북한체제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이로써 북한이 중동 국가들처럼 민주화 혁명이 재현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독재국가의 내구력을 분석하는 틀은 스볼릭(Svolik)이 언급한

---

20) Andrew G. Walder, *Communist New-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15.

21)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 (2011), 205쪽.

‘최고통치자와 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 관계’, ‘독재정권과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적 정치 갈등을 들 수 있다.<sup>22)</sup> 독재정권이 몰락 혹은 유지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적 갈등과 연관이 있으며, 실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중등과 북한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 (1) 정치 엘리트와의 갈등 관계<sup>23)</sup>

독재자와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는 체제의 내구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재자는 국가를 홀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엘리트 집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독재자는 통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점을 약속하면서 자연스레 엘리트 집단과 함께 일종의 ‘통치연합’을 구성하게 된다.<sup>24)</sup>

스볼릭에 따르면, 독재자와 정치엘리트 사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 따라 ‘비확고한 독재(contested autocracy)’와 ‘확고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로 구분된다.<sup>25)</sup> 비확고한 독재의 경우 독재자와 엘리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며, 엘리트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독재자를 축출할 공산이 존재한다. 반면 확고한 독재의 경우에는 독재자가 권력을 공고화하여 엘리트의 신뢰 위에 있기에 위협당하지 않는다.

중등의 정치 엘리트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

22) Milan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5.

23) 웨보르스키는 민주화 이행론을 엘리트 집단들이 전개하는 합리적인 전략 게임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였다.

24) Milan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5.

25) *Ibid.* p. 61



할 사항은 중동 내에서도 저마다 다양한 정치체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헨리(Clement M. Henry)와 스프링보그(Robert Springborg)는 독립 이후의 중동국가들을 공화정, 왕정, 민주주의 체제로 나누면서, 공화정의 경우 알제리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공화정을 다시 세분화해 중동 비민주국가들을 크게 벙커(Bunker)국가, 불리(Bully)국가, 세계화 왕정(globalizing monarchies)의 세 형태로 나누었다. 벙커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압(coercion)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상대적으로 주로 혈족과 부족으로 연결된 엘리트 집단의 힘이 강하다. 반면 불리국가에서는 벙커국가와는 달리 엘리트층의 혈족과 부족이 힘을 절대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지도부는 군부, 정보기구, 정당과 같은 제도적 권력에 대해서만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또한 엘리트층의 성립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명확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한 정치공동체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sup>26)</sup>

이러한 틀로 보면, 혁명이 일어난 세 국가 중 튀니지와 이집트는 불리국가에, 리비아는 벙커국가에 각각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의 혁명은 불리국가라 하더라도 엘리트 집단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중동의 주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군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실제 군부는 주로 불리국가들의 핵심적인 정치행위자이며, 그들이 소유한 토지, 노동력, 자본, 국가와의 관계, 국제 민간자본 등을 통해 자산과 입지를 확보해왔다.

튀니지의 경우,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과 이후에 벌어

---

26) Clement M. Henry and Robert Springborg,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1.

진 사건들은 반정부 운동의 흐름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벤 알리 정권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라시드 아마르(Rachid Ammar) 합참의장은 벤 알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을 하달 받았으나, “상황의 안정을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는 없다.” 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항명’의 배경에는 벤 알리와 군부 간의 오랜 갈등이 존재했다. 과거에 벤 알리는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구로 유지시킴으로써 군부가 국경방어에 집중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벤 알리체제 아래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미약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에 특별히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sup>27)</sup>

이러한 튀니지와는 달리, 이집트는 군부독재의 틀이 붕괴하는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집트 군부는 프레토리안 레짐(praetorian regime), 즉 집정관 통치의 형태로 볼 수 있다.<sup>28)</sup>

이집트의 군부는 수에즈운하 인근의 관광개발 지역 등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지는 본래 군사 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군부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이와 같이 불리국가들의 군부는 단순히 국방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주체적인 경제행위자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유한 독립된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후 무바라크의 30년 장기 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 가말 무바라크에 대한 권력

27) 황병하 외,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67쪽.

28) 서정민, “아랍 시민혁명 끝은 북한,” 31쪽.

의 부자세습이 가시화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의 군부는 정실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며 부를 축적해오던 세력이었다. 하지만 무바라크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이러한 군부의 ‘배신’은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병커국가에 해당하는 리비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 엘리트 집단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와는 달리 급속도로 반군이 조직되고 내전으로 이어진 것 역시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리비아에서 반체제 운동의 주요 구심점은 서구 교육을 받은 엘리트 세력과 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 세력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등장한 이들의 조직적인 결합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렇듯 중동의 경우는 독재자가 엘리트 집단을 통제하는 데 있어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는, ‘비확고한 독재’에 가까운 체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중동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중동의 많은 정치적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 여부에 따라 시민들의 편에 서거나, 반군을 지원하거나, 중립을 지켰음이 앞선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반면 북한은 주요 정치적 엘리트 집단인 당(黨)·군(軍)·정(政)이 저마다의 이권을 위하여 경쟁하는 체제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각 조직 간의 균형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최고지도자에게 있다.<sup>29)</sup> 비록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최고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최고지도자의 성향 및

29)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계산에 달려 있어 현재까지도 강한 의존성을 지속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점은 아직 북한이 ‘확고한 독재’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중 한 집단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다면, 북한 역시 ‘비확고한 독재’의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현재는 엘리트 집단이 모두 최고지도자의 용인 및 승인을 통한 이권의 쟁취를 위하여 분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통치연합에 기초한 독재정권은 독재자뿐 아니라 엘리트에 계도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정권 형태이다. 통치연합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와 권력의 몫은 이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또한 경합성(divisibility)을 지닌 재화의 경우에도 나누어 가져야 할 사람이 적을수록 자신의 몫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통치연합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살아남고 선택되어진 엘리트는 체제 유지에 독재자와 이해를 같이하게 될 확률이 커진다. 즉 북한과 같은 소규모 지배연합 정권의 독재자와 엘리트는 문자 그대로 한배를 탄 운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처럼, 군이 만일 독재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반정부 활동에 가담할 경우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위협이

---

30)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당·군·정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불가피했다. 이 시기 김정일은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을 주도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이들의 갈등 및 세력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채 내각 등의 기관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해주었다. 이러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행태와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는 북한의 권력관계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31) 한병진, “독재정치이론과 전망이론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과 정책,”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2.11.06), 63쪽.

된다는 사실을 북한은 오래전부터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이 군부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선군정치’를 내걸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이 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취한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외화벌이 등 주된 경제권을 군이 쥐고 있으며, 이러한 일종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북한정권이 과거의 일당통치를 주축으로 한 개인독재로부터 군부를 주축으로 한 개인독재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당과 정파의 적절한 세력 균형 역시 최고지도자가 총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32)</sup>

또한 북한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서구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부와 이윤을 위해 대외무역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상인 계층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국가 차원에서만 무역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북한에서의 상업적 거래란 주로 중국에서 밀수한 품목을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특정 지역을 기폭 지역으로 하여 반체제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리비아의 경우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시기에는 내적 연대가 강고하였으나, 미국이 제재를 풀고 투자를 시작한 뒤 부의 점유를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엘리트 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아직도 대내적 통치의 주된 명분으로 삼고 있고, 가장 강력한 영향

---

32)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인 김정은은 지난 2012년 7월 15일, 군부 1인자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숙청하였다. 이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군부 세력에 칼을 들이댄 것으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세력인 중국이 현재까지도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 등 국제적 환경 역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인남식에 따르면 고도의 실업률, 물가 상승과 식량배급체제의 붕괴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중동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결국 사회 불안정으로 연결됨으로써 정치변동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중동 지역에서 성행했던 아랍민족주의, 즉 나세리즘(Nasserism)이 약화되고 아랍의 통합을 주장했던 바티즘(Baathism)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독재로 유명무실하게 되자 아랍의 통합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정치지도층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여기에 더하여 중동전쟁에서의 계속된 패배, 이스라엘과의 갈등,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저항감이 고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아랍이 서구 국가들을 압도했었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대-기독교 문명권과의 관계에서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다는 자존심의 손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sup>33)</sup> 결국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들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며 아랍 국가들 내부의 균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는 오랜 기간 저항적 정치운동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여온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대 테러 전쟁 수행의 차원에서 2004년부터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민주주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확대 중동 구상’을 제기

---

33) 인남식, “2011년 중동 민주화운동의 원인, 현황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5.24), 4쪽.

했고, 결국 일부 중동국가에서 보통·비밀선거가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상당수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동의 시민들은 처음으로 형식적 선거가 아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 의미의 선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중동 정치 변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다른 요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디지털 기반의 SNS 서비스의 확산이었다.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 장면은 튀니지 정부의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집트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텔레비전으로 송출됨으로써 중동의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정보의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중동 국가들 역시 비밀경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방되어 있던 국가였다. 중동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들이 존재하였으며, 자국민의 여행 역시 자유로운 환경 아래에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 주민들의 사상 및 인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정보부나 내무성 산하 보안총국은 소수 이슬람 과격파나 반정부 세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그쳐 왔다. 또한 중동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국제 사회와 연관된 인권의 개념이 뚜렷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반정부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계층적 분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며, 시위 등을 행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중동의 국가들은 북한과 달리 통관, 통신, 통행 등 ‘3통(通)’ 역시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었다.

반면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왔다.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 중의 하나는 선전·선동 및 사상교육을 통한 세뇌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5년 이후부터 소련의 스탈린식 이상화와 선전·선동 등의 사상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이상화 작업에 돌입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선전·선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당 위원회의 선전·선동 부서들과 내각의 문화 예술부, 영화촬영소, 예술단 등의 기관들을 설립·확장하여 이상화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사상교육 이외에도 주민들의 조직화를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구조적 장치들을 오랜 기간 작동시켜온 국가이다. 북한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주민들과의 갈등 가능성 역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갖추어 놓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 지역에는 각급 당 조직들과 각급 근로단체 조직들이 그물망처럼 짜여있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매일같이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은 매일매일 조직 구성원들의 동향을 살피고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모든 조직 구성원들 역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인물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및 동향에 대해 조직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보고 및 감시 체계는 많은 위기를 거치면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sup>34)</sup>

또한 북한은 이미 1964년부터 1967년간 전국 규모의 주민재등록사

---

34) 고영환, “통제체계 차원에서의 중동 M-혁명과 북한의 비교,” 26쪽.



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971년 말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파생된 차등적 분류는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북한은 귀속지위에 근거한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하고 사회통제 역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경직된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주민에 대한 차별적 포섭으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는 당원으로서 행해야 하는 봉사는 초급당원일 때 요구하고, 당원으로서의 이득은 고급당원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식으로 이득을 위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상급 당원이 될수록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 게다가 북한은 당원 및 간부의 신규채용에 있어 정권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가까운 주민을 선별·포섭(co-optation)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의 경우 억압을 행사한다.<sup>35)</sup> 북한은 이렇듯 철저한 정치적 성분제를 통해 친정권 주민과 잠재적 반역주민을 극단적으로 차별하여 대우하며, 그에 따른 포상 역시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북한의 주민 통제 내구력은 최대의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줄곧 유지되어왔다. 또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간에 이전에 없던 체제에 대한 비공개적 불만 표출, 국가기관 이행 명령의 거부, 일탈, 국경 탈출과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에

---

35) 박형중, “북한의 과거와 미래: ‘변화’와 ‘붕괴’의 이분법 지양 및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모색,” 102쪽.

대한 통제를 다시금 강화하는 조치들을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방식의 변화로는 무엇보다 군 소속 기관의 활동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선군정치가 시작된 이후 모든 사회에 걸쳐 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렇듯 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주민들을 관리하는 통제의 방식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2007년부터 다시 사상적 통제, 생활적 통제, 물리적 통제의 모든 분야에서 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는 2010년에 이루어진 「인민보안단속법」 개정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인민보안단속법」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북한은 이러한 법의 목적을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민에 대한 통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의 기제만으로는 주민들을 과거처럼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다시금 봉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하였지만 정치·사상적인 통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향후 이러한 강력한 통제의 지속이 언제까지 효율성을 발휘할지는 담보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정치사회적 통제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효율적으로 억압하는 기제로서 절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의 시민들이 처해 있던 조건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종합해보면, 중동과 북한의 체제적 유사성은 실제 북한의 ‘현재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는 권위주의 체제는 언젠가 민주화로 이행할 것이라는 고전적인 이론의 틀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일정한 '기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실상 매 시기마다 대두되었던 '북한 붕괴론'의 오랜 논의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2) 통신수단의 증가가 의식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중동의 정치변동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대중 동원으로 연결되고, 결국 체제 변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북한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통신수단의 증가가 앞으로의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동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휴대폰, 인터넷, SNS 등 통신수단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 및 통신 관련 정책 및 억압기제를 설명하지 않은 채 통신수단의 발달을 민주화의 촉진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디어 및 통신수단은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의 촉진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통신은 체신성뿐만이 아니라, 체신성 직속의 전파감독국과 사회안전부, 노동당 등 3개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 중 전파감독국에서는 전국의 무선기 등록과 허가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무선 통신사의 자격여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신을 통제·감시하고, 포착 가능한 국제 발신 전파의 탐지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전파보안은 사회안전부 산하의 사회안전국과 국가정보보

위부에서 공동으로 담당하며, 전파의 보안을 위하여 불법 전파의 발생 방지, 전파 방해와 사회안전부 자체 주파수의 배분 및 조절을 관장한다. 전파업무의 총괄지휘는 노동당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군과 도당에서 모든 전파를 배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이 국제 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당(4·13 연락소)의 승인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국제 위성통신국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대학 등이 국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신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노동당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북한의 통신은 중앙 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언론에 의해 통신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통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통신정책은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통신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지휘통신과 산업통신’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전화 보급률은 매우 낮으며 통신 서비스 역시 미미하다. 반면 북한 당국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정부기관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의 운영과 증설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화교환 시스템은 중앙집중식으로 일정한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북한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은 대부분 군부와 사회안전부 등에서 국방 내지는 체제 유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은 이러한 무선이동통신 보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강화하였다.<sup>36)</sup> 이에 따라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7)</sup>

또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초기에는 평양 시내의 지도원과 간부, 관광회사의 안내요원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학생 및 상인에게까지도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고가로 팔리고 있으며, 대체로 재력이 있는 사회적 특권층이 주된 이용자이다. 따라서 앞서 다룬 대로, 북한의 최상층부와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이 현재 휴대전화를 통해서 중동과 같은 민주화 혁명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에도 일정 정도의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외부 연결 차단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공식 휴대전화로는 국제 통신 전화망에 연결할 수 없고, 해외에서도 북한 휴대폰에 전화를 걸 수 없다. 또한 북한은 특히 조중 접경 지역에 널리 공급된 비공식적인 통신 수단, 즉 중국 통신사 가입 휴대전화에 대하여 강력한 퇴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경에 전파탐지기를 설치하고, 중국 휴대전화 통화와 라디오 수신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보위부 전파감시국 소속의 27국이 담당하며, 보위부 소속 직원과 체신회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이러한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기 때

---

36)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문헌들은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을 ‘에집트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라고 표기한다.

37)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Naguib Sawiris) 회장은 2013년 5월 29일, 이집트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통신수단의 증가가 의식의 변화 등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해외의 비공식 휴대전화 연결망과 결탁하는 것뿐이다. 즉 공적 연결망의 핵심 행위자인 오라스콤텔레콤과는 다른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북한 사회는 심각한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는 자본주의 및 시장주의와 급속히 결합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휴대전화 연결망은 광고, 판촉물, 마케팅 등을 동원한 자본주의 마케팅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휴대전화 연결망은 남한의 탈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달러를 송금하는 금융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합법적인 통로를 구축했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38)</sup> 하지만 모든 통신을 철저히 감독·단속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정책으로 미루어 보아, SNS가 주된 촉매제로 작용한 중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물론 새로운 매체로 인하여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로 인하여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게 될 주민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증가가 이러한 북한의 통치방식의 변화는 일부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중동처럼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까지 성숙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가 체제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작용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38)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이론 (ANT)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6쪽.

### 3) ‘촉발 요인’으로 인한 대중 동원은 가능한가?

앞서 다룬 대로 중동의 대다수의 국가들 역시 정치적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고 비밀경찰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와 같이 정치범 수용소들을 운영하면서 자유를 억눌러 온 국가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억눌렸던 국민들의 반정부 에너지는 한순간에 혁명을 통하여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는데, 이는 중동의 혁명이 점진적 진화에 의한 단계적 분출이 아닌, 돌발적인 촉발 요인(hair trigger)에 의한 현상타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억눌렸던 국민들의 불만이 SNS 등을 통하여 빠르게 전국적으로 유포된 것이 들불처럼 혁명을 번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순교자(martyr)’의 존재, 즉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개인의 분신은 큰 변화를 추동해내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4·19혁명과 87년 민주화 시위, 체코의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동 혁명에서도 한 청년의 분신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혁명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향후 북한에서도 튀니지에서 발생한 청년의 분신과 같은 돌발적인 계기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9)</sup> 하지만 이러한 예측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적인 관점일 뿐, 현재의 북한은 무엇보다도 반체제 단체·인물 등의 구심점이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스나이더(Richard Snyder)는 독재정권의 정치변화 여부에 영향을 주

---

39) 이수석, “중동 민주화 혁명과 북한,” 2쪽.

<표 1> 스나이더의 독재정권의 정치변화 요소 구분

행위자 요소	정권 강경파, 정권 온건파, 온건 야당, 과격 야당
구조 요소	통치자의 국가제도에 대한 관계, 통치자의 국내 사회 엘리트에 대한 관계, 네 가지 행위자 요소와 국제 관계

는 요소를 ‘행위자 요소’와 ‘구조 요소’로 구별한 바 있다. 이러한 두 요소가 상호 간에 결합되는 것에 따라서 독재정권은 체제 내구성을 갖거나, 독재자와 엘리트들 간의 내부 갈등 및 혁명 등에 의하여 결국 붕괴에 이르기도 한다.<sup>40)</sup> 즉 이러한 구분은 독재정부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표 1>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체제의 존속에 있어 가장 큰 위기였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북한 내 정치 행위자 분포의 특징 때문이었다.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했던 행위자 요소는 정권 강경파뿐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빠르게 정권의 재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sup>41)</sup> 뿐만 아니라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은 북한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체제의 내구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신감을 갖게끔 하였다.

또한 북한은 오래전부터 각종 규제와 강압적인 국가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갖추고, 행정조직과 사법절차를 통하여 사회를 통

40) Richard Snyder,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Combining Structural and Voluntarist Perspectives,” H. E. Chehabi and Juan J. Linz, *Sultanistic Regimes*(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1998).

41) 박형중, “북한의 과거와 미래: ‘변화’와 ‘붕괴’의 이분법 지양 및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모색,” 108쪽.



제하고 있어 내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성적으로 그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당의 여러 부서 중에서 북한의 전체주민들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의 기본사명은 북한의 전체간부들과 당원들, 주민들의 당 생활을 장악, 통제하고 ‘당의 간부대열과 전체 당대열의 정비, 확대, 질적 향상’을 주관하며 당과 국가, 군대, 보안 등 체제수호기구의 고위층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민보안부는 조직지도부의 실질적 통제 하에 사회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민보안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보안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공안조직으로 종합적인 사회통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조직망을 통한 인민반 감시, 주민요해사업, 여행제한 등 행정적 규제와 더불어 공개처형 등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민보안부의 활동은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등 권력기관의 통제 속에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되어왔다.

셋째, 인민보안부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통제 아래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기관인 보위사령부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통제의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넷째, 현재까지 인민보안부의 억압적 사회통제체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정권의 유지와 내구성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보안부의 광범위한 사회통제활동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북한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내지 ‘촉발 요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조직적 항거나 상부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역시 이러한 통제 및 감시체제가 이완, 와해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통제·감시기구인 당 및 보안기관 등 기득권 세력, 즉 이러한 체제를 담당하는 상층부 스스로가 북한정권과 운명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촉발 요인을 억제하는 다른 강력한 기제는 바로 공개처형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권의 위기를 무자비한 탄압 및 공안기구의 대대적 강화를 통해 대응해왔다. 실제 공개처형의 빈도는 1990년대 초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 229회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00년대에는 대체로 약간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의 내부 위기의 굴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내부의 위기는 정점에 달했으며, 현대에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42)</sup>

이렇듯 현재의 북한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촉발 요인이 부재할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불만을 대중적인 동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 내 존재하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의 사회조직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회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들로 주민들의 연대성 및 자발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조직들이다. 현재 북한

---

42) 위의 글.

주민들이 가지는 사회의식의 발전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나,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누군가 체제에 저항하며 분신 등의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변화를 추동할 조건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는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주민 소요사태가 즉각 발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또는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록 최근에 밀무역 및 시장화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기제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사회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는 경로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성 및 파급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반체제 활동이 실패할 경우의 무자비한 처벌 및 연좌제의 위협성을 넘어서면서까지 조직을 구성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및 시사점

중동의 민주화 혁명은 민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랜 기간 철권을 휘두르던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부패할 경우 결국은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에 이어 예멘, 시

리아, 심지어 안정적인 정권이라 분류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점은 중동 지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을 얼마나 갈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중동의 변화를 곧바로 북한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논지가 현실성을 갖지 못함을 논증하였다. 하지만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 대하여 아무런 시사점 및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중동에서 나타난 혁명의 방식 및 요인 등은 분명 향후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흐름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혁명에 대한 지지 및 이에 대한 국제적 연대 구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재의 중동이 북한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비로소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경제적 양극화로 귀결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많은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sup>43)</sup> 이들에 의하면, 중동의 투쟁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에 대한 범대륙적 규모의 혁명적 저항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강요한 경제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중동의 혁명은 달리 보면 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중동 국가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반미, 반제, 반이스라엘 정서와 친팔레스타인이라는 변화된 ‘범아랍민족주

---

43) 실제 2008년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는 이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중동 민중의 봉기 및 투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의’는 본질적으로 중동에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군사적, 정치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만이 급격한 변화로 폭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재까지 반미를 대내적 통치의 주된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경우 더욱 중동의 혁명과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중동과는 달리 혁명을 추동하는 시민사회 세력의 미흡과, ‘선군’으로 대표되는 ‘군’과 최고지도자의 밀접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이러한 혁명을 추동해낼 조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통신투단의 확대가 중동과 같은 정치 변동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체제 유지에 순기능을 가져다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과 북한의 실질적인 연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많은 부분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 역시 중동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선부른 예측은 삼가야 하며, 북한과 중동과의 외교 변화 문제 및 국제 사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등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재스민 혁명’의 아시아화(Asianization) 혹은 동진(東進)을 막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연대를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재스민 혁명을 ‘모리화 혁명(茉莉花革命)’이라 명명하고 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중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내치(內治)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포착된 바 있다. 이러한 대외적 조건 역시 북한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힘들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색깔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체제의 공고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4)</sup> 중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민감성은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를

잘 드러낸다. 현재 중동의 민주화 소식은 여러 가지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에 의하면 양강도 혜산시에는 무바라크의 하야 소식을 전하는 전단지<sup>44)</sup>가 뿌려졌으며, 리비아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 리비아 사태에 관한 소식들이 북한 내에 확산되고 있다.<sup>45)</sup>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앞서 언급한 정보 차단 및 대내통제를 강화하여 중동 민주화의 여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혁명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의 완전한 민주주의와 자유 실현을 낙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상존해 있다. 중동에서 발생한 시위 및 민주화는 그 발생 원인이 상이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낳고 있으며, 각 국가 내부에는 뿌리 깊은 갈등 및 마찰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나 협의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룩한 이집트 역시 포스트 무바라크 이후 군부가 정치 세력을 장악하였고, 향후 어떠한 정치권력구조가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동의 변화를 ‘시민 혁명=민주화’로 규정하는 기본적인 논의조차도 많은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안정적인 민주화로 반드시 이행될 수 없음은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뒷받침된다. 또한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교훈들이 북한의 미래 및 변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

44) 『평양방송』, 2011년 3월 10일; 『로동신문』, 2011년 4월 2일.

45) 또한 최근 북한의 『로동신문』은 “리비아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회유 기만에 넘어가 자체의 무력강화 노력을 포기한 나라들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리비아를 꼽기도 하였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18일.

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북한지도부가 중동의 민주화 혁명으로 인하여 그들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크나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중동 혁명의 주된 원인이 SNS로 인한 것이었음을 볼 때, 북한은 현재의 통신 사업에 이전보다 강력한 감시와 보안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여 그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해줄 것이라는 것 역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에서 ‘혁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올바른 민주화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보화의 확대를 추동하기 위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에 대한 고립·봉쇄·제재가 아니라 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 평화공존의 무드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27일 / 채택: 7월 31일

---

46) 캐로더스(T. Carothers)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과 공고화(consolidology)의 단계적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제3의 물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이행’ 이후에 민주화가 크게 진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들을 ‘그레이존(Gray Zon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중동의 실상 역시 ‘그레이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실패 및 시행착오들은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 및 민주화 과정에 있어 크나큰 교훈이 될 수 있다. Thomas Carother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1, 521(2002).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로동신문』, 2011년 4월 2일.

『로동신문』, 2013년 4월 18일.

『평양방송』, 2011년 3월 10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서정민 외,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서울: 대외정책연구원, 2011).

필뮤터, 아모스(Amos Perlmutter),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김문조·임현진 옮김  
(서울: 정음사, 1986).

황병하 외,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2).

#### 2) 논문

고경민 외, “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  
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2011).

\_\_\_\_\_, “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결합을 중심으  
로,” 『중동문제연구』, 제11권 2호(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2).

고영환, “통제체제 차원에서의 중동 M-혁명과 북한의 비교,” 『중동 시민혁명  
과 북한 민주화 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1.3.14.).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이론  
(ANT)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형중, “북한의 과거와 미래: ‘변화’와 ‘붕괴’의 이분법 지양 및 새로운 개념  
과 정책의 모색,”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2.11.06.).



- 서정민, “아랍 시민혁명 끝은 북한,” 『통일한국』, 3월호(2011).
- 송봉선, “요동치는 중동, 북한은 어떻게 될까,” 『북한』, 제472권(2011).
- 유달승, “아랍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 『문화과학』, 제62호(2011).
- 이수석, “중동 민주화혁명과 북한,” 『NEWSLETTER』, 제138집(2011).
- 인남식, “2011년 중동 민주화운동의 원인, 현황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11.5.24.).
- 장지향, “혁명의 유발성과 다양성: 2011년 ‘중동의 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No. 11(아산정책연구원, 2012).
- 정상률, “빵의 혁명, 자유의 혁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동 민주화혁명의 배경과 남아있는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제43호(2011).
-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2011).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한병진, “독재정치이론과 전망이론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과 정책,”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2.11.06.).

### 3. 외국 자료

#### 1) 단행본

- Henry, Clement M, and Springborg, Robert,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Diamond, Larry,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 Linz, Juan J. and Stepan, Alfred,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6).

2) 논문

Carothers, Thoma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1, 521(2002).

Grand, Stephen R., "Starting in Egypt: The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Brookings*(February, 2011).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 Greenstein and Nelson Polsby(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Vol. 3.

Snyder, Richard,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Combining Structural and Voluntarist Perspectives," H. E. Chehabi and Juan J.(ed.), Linz, *Sultanistic Regimes*(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The Democratization of the Middle East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 : Critical Reconsideration

Kwon, Youngseung(Sungkyunkwan University)

Som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end of ‘the Fourth Wave’ will occur in North Korea, due to the recent democratic revolutions seen in the Middle East. Many scholars predict that the main aspects of the democratic revolutions in the Middle East will occur in North Korea also. The primary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the governing systems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consciousness-raising due to the increase in means of communi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ass mobilization resulting from a ‘hair-trigger’.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Middle Eastern-style democratic revolution in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above three class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several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Unlike the Middle East, North Korea lacks a civil society that could instigate a revolution. Without this condition, change is less likely due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ander in Chief as represented in the ‘military first’ policy.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resulting from increased use of SN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at played a huge role in bringing revolution to the Middle East would be hard to reenact in the present stat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benefit in maintaining the regime. Secondly, the occurrence of ‘hair triggers’ like the ripple effects of self-immolation for example would also prove difficult in North Korea due to long-term social controls and harsh punish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analyzing North Korea as a ‘second Middle East’ is untimely. Further study of diplomatic 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iddle East, and the direct leverage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Keywords: Middle East, North Korea, democratization, revolution, SNS,  
hair-trigger